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20. 06. 29 <제29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정책 제언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 기조로서 중추국 외교전략 제언

- 그동안 미중 경쟁에 대해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 양자택일 거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등의 반응적이며 현상유지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했음. 그런데 코로나19 시대 들어 미중 경쟁이 악화되고 미중 간 진영화와 경제 탈동조화(decoupling)의 리스크가 커지자, 국내에서 안보와 경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의 요구가 급증함.
- 국내에서 미중관계 대응에 대해, 양자택일 거부, 전략적 모호성 견지, 한미동맹 선택, 미중 등거리정책, 미중 이중 연계정책, 친중정책 선회 등 다양한 정책옵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본고가 주장하는 '중추국 외교전략'은 다른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의 진영화와 탈동조화를 거부하고, 강대국 세력정치의 대안으로 다자주의와 국제규범의 원칙에 따른 공존·공영의 국제질서를 제시하는 것임.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의료방역 물자 제공 시 우선순위의 전략적 결정과 배분
- 한국은 의료방역 물자의 자체 생산능력을 구비한데다 일찍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성공하여 동 물자의 해외공급 역량이 있는바, 이를 우리 국익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방역물자는 귀한 전략물자이므로 이를 단순히 상업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국가안보 목표(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동북아 평화협력, 세계평화·공영 기여 등)와 외교원칙과 가치에 따라 공급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의 진단키트·의료지원 요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태지역 미군에 대한 진단키트·의료방역을 제공토록 함.
-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동북아 보건협력을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핵심 축으로 추진 제언
- 2019년 말 한중일 정상회의, 2020.3.20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보건협력, 코로나 대응 협력에 합의했으나, 아직 성과가 미미한 것이 동북아 협력의 현주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 이니셔티브가 불가피함.
- 구체적 사업으로, 역내 감염병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역내 감염병 공동 연구개발 기관 설립, 역내 방역의료 물자의 생산품목·재고정보 교류 및 공동 비축,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감염병·방역물자 정보교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남·북·중·일 4자(국제보건기구 등) 동북아 보건협력회의 개최 등을 제안함.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방역물자는 귀한 전략물자이므로 이를 단순히 상업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국가안보 목표(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동북아 평화협력, 세계평화·공영 기여 등)와 외교원칙과 가치에 따라 공급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1.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강대국 세력정치와 자유주의적 국제체제의 퇴조

21세기 강대국정치와 지정학의 귀환 및 미중 경쟁에 대한 경고

- 20세기 초 할포드 맥킨더(Halford J. Mackinder) 영 옥스포드대 교수가 창시한 현대 지정학은 한동안 잊혔다가, 2010년대 들어 재등장하여 대륙세력 중국과 해양세력 미국 간 충돌을 예견함. 21세기 미국 지정학은 중국의 최근 해군력 증강을 대륙세력인 빌헬름 독일이 해군력 증강으로 영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는 것에 비유하고, 중국이 동·남중국해에 대한 해양지배권을 장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태평양에 까지 영향력 확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함.
-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랜드 체스보드(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1997)’에서 미국은 세계패권의 지전략(地戰略)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배적이고 적대적인 세력의 등장 반대”를 추구해 왔는데, 동아시아에서도 중국 또는 일본이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저지할 것을 역설했음.
-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일찍이 “미래로 복귀(Back to the Future, 1990)”에서 탈냉전기의 보편적인 국제정치 이념인 자유경제 평화론, 민주주의 평화론, 핵전쟁 소멸론 등을 반박하고, 다극체제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강대국 전쟁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음. 『강대국 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2014개정판)』에서도 유일 지역패권국 미국과 부상하는 지역패권국 중국 간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함.
- 미국이 “국가안보전략보고서(2017.12)”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2020.5)”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전략경쟁을 선포한 것은 이런 지정학적 판단을 반영한 것임.

강대국 세력정치의 부활과 규범 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퇴조

- 탈냉전기의 초기 20여 년간 국제협력, 자유무역, 상호의존, 지역통합, 다자안보, 패권안정, 국제레짐, 공동안보 등 이상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이 국제정치의 주류 담론을 구성했음. 하지만 21세기 들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 등 다수 강대국이 (재)등장하여 세력을 분점하는 다극체제가 조성되면서, 기존 미국패권 질서가 후퇴하고 강대국정치, 세력경쟁, 세력전이, 군비경쟁, 민족주의, 지정학 등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이론이 급부상했음.
- 2010년대 들어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해체 징후가 빈발했는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해군력 증강,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러시아의 크림리아반도 합병, NATO의 미사일방어망 설치와 러시아의 반발, 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 배치와 중국의 강한 반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및 재무장 추진,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반중) 4자협력 추진 등 사례가 있음.
-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일국주의·인기연합주의 성향을 가진 소위 “스트롱 맨”들이 새로운 국가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음.

2.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충격과 전망

코로나19 감염병의 인류에 대한 충격

- 바이러스 감염병이 인류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으로 최대 5천만 명이 사망하여 근래 인류 최대의 인명 참사로 기록하였음.
-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인플루엔자 감염병이 계속 발병하여,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으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와 세계화 탓으로 감염병이 빈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앞으로 그 빈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사회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일찍이 세계보건기구(WHO, 1948)를 설립했고, 21세기 들어 ‘보건안보’를 주요 세계안보 과제로 주목하고 대비하여 왔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서 보건 운동가로 변신한 빌 게이츠는 201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오늘 인류에게 감염병이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음.
- 그런데 막상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선진국·후진국, 강대국·약소국을 막론하고 감염병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0.6.16. 현재 세계적으로 800만 명 확진에 44만 명 사망으로 5.5% 사망률을 기록했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국내정치 지향성 및 일국주의·민족주의로 인한 세계화의 제동

- 오늘 대부분 국가는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 사회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실업대란과 경기불황에 대비한 긴급 재정조치 등에 급급한 실정이며, 향후 백신이 개발되고 널리 접종되기 전까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 코로나19의 초기 충격에서 벗어난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불거진 인종갈등과 계층갈등, 대량실업 대응 및 경제재건 방안, 과도한 국가통제에 대한 논쟁, 사회경제활동의 재개 시기와 방법 등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논쟁에 휩싸였는데, 인명 손실과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좌절감이 매우 커서, 이런 국내정치적 공방은 치열하고 장기화 될 전망이다
- 오늘같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정치환경에서는 우연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근 미국에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미국과 유럽에서 초대형 사회적 소요와 인종차별 철폐운동으로 비화한 것도 코로나19 사태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권능도 강화되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도 이런 국가주의 성향도 지속될 전망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둘러싸고 국가와 개인 간 갈등이 증가할 전망이다.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외부지원 없이 각자 고군분투했고, 심지어 의료물자 확보를 위한 분쟁도 있었는데, 그런 경험으로 인해 국제협력보다는 자조와 각자도생 방안을 선호할 전망이다. 탈냉전기의 세계화 시대에 중국 중심의 산업 공급망에 의존했던 많은 국가들이 공급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 자체 산업역량 강화, 리쇼어링,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거리단축(지역협력) 등을 적극 모색 중임.
- 그렇다고 국가들이 전면적인 공급망 재편성과 경제자립을 추구할 가능성은 낮는데, 오늘 같은 세계화 시대에 비경제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임. 그동안 과도하게 경제적 효율성과 국제분업을 추구한 나머지 발생했던 사회경제적 부작용(불평등, 실업, 과도한 분업, 산업공동화 등)을 교정하는 정도의 ‘재세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가속화와 ‘신냉전’의 조짐

- 미국과 중국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코로나19의 기원과 명칭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방을 폄하하는 공공외교 공방전을 벌이며, 우방국에 대한 의료보조 지원외교를 강화하는 등 세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임.
- 중국은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서태평양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할 때를 틈타 분쟁 중인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화와 영유화를 급진전 시켰음. 미국도 해군의 코로나19 감염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 작전을 지속하여, 중국의 인공섬 영유화 기도를 거부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시위했음.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민주당과 언론의 비판이 고조되자, 다음과 같이 ‘중국책임론’을 제기하며 책임을 피하고자 함. 첫째,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관련 의료정보를 은폐하여 미국의 대응이 지체되었고, 둘째, 미국이 마스크·방호장비·인공호흡기 등 핵심 의료물자의 공급을 중국에게 과도히 의존한 결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물자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셋째, 중국이 (저질) 의료물자 공급을 대외적 영향력 행사에 이용하고 있음.
- 중국 시진핑 체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치리더십의 훼손, 주민 불만, 경제폐쇄와 지역봉쇄로 인한 경기하락,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바, 대응책으로 내부적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선전하고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의료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영향력 확대를 추구함.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무차별적인 소위 ‘중국 모델’이 비판받았지만, 보건역량이 부족한 권위주의국가들은 강력한 정부개입과 사회적 통제조치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중국 모델’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추정함.
- 미중 전략경쟁이 가열되면서, 국제사회의 진영화와 ‘신냉전’의 가능성이 오늘 국제사회에서 중대 화두로 등장했는데, 사실 탈냉전기 들어 다자주의 국제협력과 세계 가치사슬의 제도와 관행이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친미·반중 진영과 친중·반미 진영으로 양분되는 전면적인 냉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전망이다.
- 미중 간에 미래 핵심 전력인 5G, AI, 군사용 무인 항공기, 로봇, 반도체 등에서 기술우위와 독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히 경쟁할 것임. 미국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또한 코로나19 사태 때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인해 인명 손실에 컸다는 반성에서 신뢰할 있는 동맹우호국과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할 목적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상을 모색 중임.
- 오늘 국제사회는 과거 냉전체제와 달리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국제네트워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전면적인 진영화를 상상하기 어려움. 하지만 현 경제성장 추세가 유지되어 2030년쯤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경제력 역전이 발생하면, 2030년대 들어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첨예화되고 국제사회의 진영화도 촉진될 전망이다.
- 2020년 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미중 간 지난 4년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갈등과 타협이 반복될 전망이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전략경쟁은 강대국정치의 속성상 불가피하며, 다만 미중간 경쟁과 협력 병행, 대중 연계를 통한 변화 추구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미중 경쟁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의 세계 리더십 포기와 다자주의 국제체제의 약화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리더십이 부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경통제 및 의료물품을 두고 동맹우호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부재’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더욱 고착되었음.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들은 세계공동체의 무능한 민낯과 부족한 의료물품을 놓고 국가 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을 벌이는 것을 목도했음. 따라서 다수 정치지도자들은 생존을 위해 국제협력보다는 각자도생, 국제공조보다는 자조, 공영보다는 자강, 다주주의보다는 일방주의를 더욱 중요한 외교원칙과 덕목으로 추구할 것임.
- 21세기 들어, 미국의 세계 리더십 방기와 신흥 강대국의 등장으로 강대국 세력정치가 부활하면서, 냉전기부터 미국에 구축했던 자유주의적 규범 기반의 국제레짐이 점차 후퇴했는데,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추세를 가속화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국제협력과 다자주의의 최고 주창자인 EU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책공조와 공동대응에 실패하여 한때 내부 갈등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점차 회복 중임. EU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책공조와 공동대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역내 물자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협약을 무시하여, 역내 갈등을 조장했음. 예를 들면, 독일과 프랑스는 의료물자의 역내 수출을 제한하고, 폴란드는 국경을 전면 봉쇄했고, 오스트리아와 체코는 이탈리아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결과, 최대 인명손실이 있었던 이탈리아는 오직 중국으로부터 의료방역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음.

기존 미국패권 질서가 후퇴하고 강대국정치, 세력경쟁, 세력전이, 군비경쟁, 민족주의, 지정학 등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이론이 급부상했음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권능도 강화되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도 이런 국가주의 성향도 지속될 전망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둘러싸고 국가와 개인 간 갈등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 경제성장 추세가 유지되어 2030년쯤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경제력 역전이 발생하면, 2030년대 들어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첨예화되고 국제사회의 진영화도 촉진될 전망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세계 리더십 방기와 신흥 강대국의 등장으로 강대국 세력정치가 부활하면서, 냉전기부터 미국에 구축했던 자유주의적 규범 기반의 국제레짐이 점차 후퇴했는데, 코로나 19 사태는 이런 추세를 가속화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사실 미국이 WHO와 협력관계만 잘 유지했다더라도 미국과 국제사회는 코로나19사태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명손실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었을 것인데, 양측이 반목하면서 리더십 국가가 부재한 소위 'G-0 세계' 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음.

3. 미중 경쟁 악화와 국제레짐 약화에 대비한 한국외교의 과제

미중 경쟁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선제적·전략적 대응 추진

- 외교부는 2019년 7월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지 요청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전략 수립을 목표로 장관급의 외교전략조정회의(연 2~3회 개최), 차관급의 외교안보 및 경제과학기술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
- 외교부는 2차 외교전략조정회의(2019.12)에서 미중 간 타협점을 선점하고 우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여 원칙기반 외교, 확대협력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 등 3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음.
- 원칙기반 외교와 확대협력 외교를 통해 우리의 사안별 국익과 미·중의 타협선을 미리 분석하고, 원칙기반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며, 우리 외교원칙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지지 확보를 위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중견국과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임. 나아가 전략적 경제외교를 통해 미국 기술과 중국시장에 대한 동시적인 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함.
-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많이 제기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사드, 중거리미사일) 추가 도입 가능성, 미중 간 과학기술표준 분리(5G), 미국의 대중 첨단물자 수출통제 및 거래금지 요구, 세계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응 원칙을 조속히 정리한다는 입장임.

미중 경제의 탈동조화 및 세계 가치사슬의 재편성 가능성에 대한 대비

- 코로나19 사태 때 중국 중심 세계 공급망의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한 모든 국가들은 유사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산업역량 강화,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거리단축(지역협력), 비대면 산업 등을 적극 추진 중임. 사실 이미 중국의 임금 상승,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 강화, 산업자동화로 인한 리쇼어링 추세가 진행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추세를 가속화함.
- 공급망 재편성과 자립경제 가속화 상황에서 대국은 내수시장이 커서 각자도생과 자조가 가능하고,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 중남미 등은 지역협력체가 작동하고 있어, 지역협력을 통해 '지역 가치사슬' 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음.
- 하지만, 동북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협력체가 없고, 미중 경쟁도 치열하여, 반세계화와 탈동조화 시대에 큰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 특히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할 때, 국내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무역의존도도 과도히 높아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미중 경쟁 완화와 지역협력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다른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하여 자유주의와 규범 기반의 국제레짐 재건 추진

-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반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은 이런 추세로 인한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중견국·중간국과 자유주의적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한국은 중견국 협력과제로서 신 안보현안에 대한 공동안보·포괄안보체제 구축을 제기하며, 한국이 적극 기여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높은 의제로서 감염병, 기후변화, 핵비확산, 핵군축, 핵안보, 빈곤단파, 사이버안보, 난민 등이 있음. 비전통적·초국가적 신안보과제는 국제사회가 공동대응을 할 때 비로소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라는 격언이 이에 해당됨.
- 특히 감염병은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국과 개도국, 강대국과 약소국을 차별하지 않고 대량 발병했기 때문에 이타적 인도주의 정신에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을 도와야 하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의 의미가 더욱 부각됨.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가들의 초기 대응 실패는 초국가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유럽연합은 초기의 대응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다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서유럽국들은 미중 경쟁을 적극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다자주의 동맹' 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많은 국가가 공감과 참여의사를 밝혔음. 한국도 미중 경쟁을 완화하고 자유주의 국제레짐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자주의 동맹' 에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유럽연합은 지난 5월 4일 폰데라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주재로 '코로나19 글로벌 대응(Corona Global Response)' 을 위한 국제공약 화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했는데, 동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40개 국가와 UN·WHO·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참가했으며, 1단계로 80억불을 모금(한국 5천만불 기여 약속)과 코로나 백신·진단·치료제의 공동개발·생산·분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성공했음. 이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마스크·치료제·백신개발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쟁탈전과 대조되는 상황임.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할 때, 국내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무역의존도도 과도히 높아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미중 경쟁 완화와 지역협력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반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은 이런 추세로 인한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중견국·중간국과 자유주의적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발행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